



보건복지동향

2005. 8. 25 ~ 2005. 9. 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평생학습체계 구축위한 뉴패러다임 양해각서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5일 14시 공단회의실에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실천을 위해 뉴패러다임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공단은,

- 사람중심 사회와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연계하여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는 지속적인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직원의 전문성과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 조직과 개인의 변화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노인요양보장제도 본격적인 홍보전개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지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광고를 케이블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8월말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홍보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중풍 등 노인요양문제에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목적으로 함.
- 이번 광고는 “치매·중풍노인, 아무도 돌 볼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돌봐야합니다”라는 핵심카피로 대변되는, 노인요양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인 무관심을 적막한 영상을 통해 형상화.
- 특히,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광고에 김근태 장관이 조연으로 직접 출연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
- 홍보광고는 8월말부터 OCN, M-NET 등 5개 케이블TV와 라디오 MBC-AM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18:05~20:00)’, 2시의 데이트(14:00~16:00) 등 3개 채널과, 9월1일부터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네이버 등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방영됨.

2005상반기 급여비 8조 7,789억원으로 전년상반기 8조 834억원 대비 7.5%증가 - 『2005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5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398천명이었고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644천명이었다.

-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지역별 변동을 보면 2000년이후 직장적용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00년말에는 22,404천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45,896천명의 48.8%를 점유하였으나, 2005년 6월말에는 26,469천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47,398천명의 55.8%를 점유하여 5년여동안 4,065천명이 증가.
-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01년말 70,245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4년말에는 218,580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5년 6월말 현재는 198,168명이었다. 이중 외국인은 183,330명이었고, 재외국민은 14,838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55,440명, 경기 53,617명, 인천 13,028명으로 수도권에 61.6%가 몰려 있었고, 경남 11,973명, 경북 10,573명, 부산 9,565명으로 경상도지역에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5년 상반기 건강보험료부과액은 8조 7,025억원이었고, 이중 직장보험료는 6조 2,514억원, 지역보험료는 2조 4,511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보험료(개

- 인부담기준)는 19,606원이었고, 직장은 19,853원, 지역은 19,301원을 부담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04년에 분만이외에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치핵으로 199,718명이었고, 그 다음은 노인성백내장이 135,676명, 상세불명의 폐렴이 114,844명 순이었다. 다빈도 질환 중 2000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를 한 질환은 협심증으로 2000년 25,507명에서 2004년에는 49,329명으로 1.9배 증가하였고, 노인성백내장도 1.8배, 누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치핵도 1.6배이상 증가.
- 2004년에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방문한 질환은 급성편도염으로 859만명이 한번 이상 진료를 하였고, 2위는 급성기관지염, 3위는 급성상기도감염으로 호흡기계 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4위는 치아우식증임. 호흡기계질환과 치과질환을 제외하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387만 7천명이 진료를 받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0년과 비교하면 2.75배 증가함.

9월 1일부터 암 환자 진료비 부담 평균 25%~30% 경감

- 암환자 혜택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3개월 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

오는 9월 1일부터 암환자와 개심술·개두술을 하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또한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항암제의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제도가 9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암환자 진료비 부담이 약 25%~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 특히 항암제의 경우 그간 환자의 상태 등(예 : 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 이상에만 사용)으로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되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라면 대부분 보험을 적용받게 됨.
-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유예기간 3개월(입원환자인 경우 1개월)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금년 12.1일(입원환자는 10.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국립암센터·서울대학교병원·아산서울중양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병원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음.
-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을 현재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8년 9~10개 상병군까지 늘려나갈 방침이고, 암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대응 조직 등 개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할 조직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설치.
- 이와 아울러 현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로 개편.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의 기존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개편하여 동 정책본부 소속으로 편입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 조직체제로 구성.
-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된다고 평가.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이외에 「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단」 및 「보건복지콜센터」 설립 조직도 개편한다고 발표.

국내입양활성화 세미나 개최('05.9.1~9.2) - 지자체, 입양기관 등 입양관계자가 모두 참석, 국내입양활성화 방안 모색 및 공감대 형성

정부(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아동 담당공무원과 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시설(아동상담소) 관계자 등 전국의 일선 현장의 입양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내입양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내입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주제를 입양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및 참여방안, 입양가정의 확대방안, 요보호아동의 적극적인 입양조치방안,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방안, 국내입양 사후관리 방안 등으로 나누어 심도 있는 국내입양활성화 방안을 모색.
- 또한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혈연을 중시하는 입양문화가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
- 따라서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관·입양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와 민(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입체적이고 심도 있는 국내입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국내입양 문화를 개선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일제조사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빈곤문제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9월 1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홍보 및 일제조사기간 설정·운영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및 신청조사 기간을 40일간('04. 9. 5~10. 14) 설정·운영하여 이웃주민이나 통(리)·반장 등의 협조를 얻어 빈곤층을 적극 발굴보호하고, 보건소,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명단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토록 함.
-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되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각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자활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시·군·구 자체지원사업, 민간지원 연계 추진 등 지원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강구키로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9.5(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
-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성명,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의 분실가능성에 대비 백업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관련기관간 적극 협력하도록 함.
-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신상카드 제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함.

“사회복지계의 숨은 일꾼들 빛나” – 제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보건복지부는 2005년 9월 7일 제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훈장을 비롯한 정부포장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사회복지인식 제고에 나섰다.

-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사회복지계의 숨은 일꾼들에 대한 포상수여.
-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바로 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가 이어져 “사회복지사업윤리선언 낭독” 및 “대회본상, 우봉봉사상” 등을 수여하여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새로이 하는 시간을 가짐.
- 또한 장애인·실버아이디어용품 체험전, 전국사회복지프로그램 전시회 등이 마련되어 사회복지를 오감으로 느끼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평소 어려운 여건 하에서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마음의 쉼을 얻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일을 기념하여 제정된 후 올해로 여섯돌을 맞는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9.7.~9.13.)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들도 사회복지세미나, 백일장,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국민의 사회복지인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북돋을 예정.

차관지원의료기관 채권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정부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공단 밀집지역 및 농어촌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OECF), 독일(KFW), 세계은행(IBRD)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168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해 차관 자금을 지원하였다.

- 지원기관중 107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차관자금도 상환이 되고 있으나, 급격한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로 차관지원의료기관중 23개 의료기관은 부도가 났고 여타 다른 의료기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간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차관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임. 당초 정책 목적이 차관자금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으로 말미암아 정부 지원의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고, 2006년에는 대부분의 차관선이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요청됨.

-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하여 모든 차관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차관병원의 경영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용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하는 등 차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상환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인하(6.5~15% → 4~6%로 인하)하고,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를 조정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 재전대계약서 변경을 2005.9.30일까지 추진 중이며,
- 취약지 민간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차관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병원의 설립 취지 및 환경 변화에 맞게 환차손 대책,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등 입법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

국민연금, 전문가 중심의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키로

국민연금은 2005년 6월말 현재 150조원이 운용 중에 있으며,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금으로 성장하였다. 기금운용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금이 투자한 주식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절차 및 기준 등을 2005년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24명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9.6(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9인으로 구성하였음. 또한, 9.29(목)경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임 등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

- 앞으로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방향 및 기준, 절차, 공시방안 등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OECD Health Data 2005를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ECD Health Data 2005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국민의료비 지출, 공공 및 민간재정지출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발표하였다.

<국민의료비 지출>

- 2001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의료비 지출은 대개 소득과 연계하여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음.
- 따라서 한국의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472달러와 비교하여 1,074달러로 평균의 43.4%.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1991년도와 비교하여 2003년도에 273%의 증가를 보여, OECD의 평균 증가율인 24.6%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서, 향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

- OECD 19개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003년에 49.4%에 그쳐,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의 2003년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70.3%와 비교했을 때 21%p 정도 낮음을 보여줌.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평균이하 국가는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단, 미국의 경우는 민간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인부담 비율이 낮으나, 인구의 16%가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음.

〈보건부문의 의료자원 및 활동〉

- 한국의 급성기의료병상수는 2003년도에 인구 천 명당 5.9개로, OECD 19개 국가 평균인 4.3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급성기의료병상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991년과 2003년 사이 인구당 급성기의료병상수의 OECD 평균은 12.6%의 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동기간 103.3%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급성기의료병상수는 한편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의료병상과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의료이용〉

-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02년도에 10.6회로, 일본(14.1회), 슬로바키아(13회),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3년도에 한국의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OECD 16개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1991년과 2003년 사이 3.6% 감소하였으나 이는 OECD 국가들의 재원일수 감소율(OECD 평균 16.6% 감소)보다 훨씬 적음. 한국에서 국민 1인당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은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의료병상 사용에 있으며, 병원의 과잉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임.

〈건강 수준〉

- 한국인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1960년과 2002년 사이에 24.5년 증가. 1960년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인 68.4세보다 16년 낮았으나, 2002년도에는 76.9세로 24.5년 증가하여 OECD 평균인 77.7세보다 불과 0.8세 낮음.

〈건강 위험요인(Risk factor)〉

-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성인의 흡연률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왔으나, 한국 남성의 흡연률은 2001년도 기준 61.8%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실업계고등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자)가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일부 학원에서 확대 해석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자를 입학시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밝힘.
- ※ 고등학교 재학생중 학원 등에서의 등록은 3학년에 재학하는 자에 한한다(안 제4조).
- 보건복지부는 또한 기존 응시자격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실업계고등학교간호관련학과만 인정하던 것을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도 인정함으로써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힘.

2005년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생명지키기 7대 선언 -

보건복지부와 자살예방협회는 제2회 세계자살예방의 날(9. 10)을 맞이하여 2005. 9. 9(금) 10:00부터 11:30까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정신보건관련단체 임원, 정신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자살을 비롯한 생명경시풍조를 지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생명지키기 7대 선언」을 공식 선포하는 한편,
- 지난 1년간 동안 생명존중의 정신을 이 사회에 구현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봉사, 문화, 보도, 학술부문의 생명사랑 대상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고 밝혔다.

MRI 등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추진

- 암 등 보장성강화 및 건강보험혁신 TF 과제등 53개항목 개선 -

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이 되고 있는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로 개선하여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 또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혁신 TF팀에서 전문가 등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된 급여기준과 중증질환 관련 항목 등 53개 항목(MRI 포함)에 대한 기준을 개선
- 동 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5일부터 적용(차등수가제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은 11월1일)
- ※ 제1차로 2005.6.24 84개항목 기준개정 완료(7월1일 시행)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13일 14시 프레스센터에서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치협, 한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공공부문 등 20개 단체장 및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20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가 손을 맞잡고 그동안 고질적인 부패를 근절하고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이행에 합의
-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 추진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약의 이행을 점검·평가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179곳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이번 평가는 '04년도 상반기 분만이 발생한 1,2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분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732개 기관의 약 25%에 해당하는 179개 기관을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으로 선정.
-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령산모, 다태아(多胎兒) 등 제왕절개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위험요인을 반영한 '위험도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을 개발하여 처음 적용·분석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임.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연분만 확산과 올바른 출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어촌사랑 자매결연 협약 체결

-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상생의 기반 구축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협중앙회와 “어촌사랑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고, 9월 14일(수) 오후 3시 공단 대강당에서 협약식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 어촌사랑 자매결연은 도시와 어촌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해증진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봉사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됨.
- 이번 수협중앙회와 자매결연협약체결에 이어 1~2개의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특산물 팔이주기, 어촌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공단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어촌마을 휴식공간 이용 등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
- 어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은 도시와 어촌이 함께 발전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공단 임직원들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인수발보장법, 본격적인 입법절차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9. 15.(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올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기반임
- 이제도가 도입되면,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인의료비의 효율화와 간병·수발인력의 고용창출(5~6만명)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함
- 「노인수발보장법안」은 9월말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협의,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줄여주고 ... 도덕적 해이는 바로 잡아야

-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 등 의료비 지출실태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출 실태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27개 의료기관의 2004 입원진료비, 심평원의 2003년 심사청구자료 및 일반국민 2,005명 대상의 전화조사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지출 실태를 비교하여 발표하였는데, 공급자 조사 결과 의료급여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율이 1종은 15.5%, 2종은 27.6%로서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이 과중한 편이므로 급여 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03년 청구자료 법정급여비용 분

석에 의하면 의료급여 1종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하여 1.3배정도 장기입원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금융자산 조회결과 중점 관리대상자 3,764명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23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하여 수급자('05.7 현재 149만명) 중 중점 관리대상자 3,764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도 금융자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금융자산이 많음에도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를 배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금융자산조사는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파악하여 과다하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함으로써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매년 실시.

씨름유전자 결함이 암의 원인, 세계 최초 규명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연구소의 장연규(42) 발암원연구과장이 “씨름하는 유전자”라는 별명을 지닌 ‘스모(SUMO)’ 유전자가 암발생의 주요 억제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것을 세계적 권위의 생물학 잡지인 ‘분자세포(Molecular Cell)’ 지 9월호에 표지논문으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유전자의 집합체인 염색체는 여러 가지의 단백질이 결합하여 외부의 위해한 자극으로부터 보호되고, 이러한 기능이 없으면 염색체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됨. 장박사의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스모(SUMO)'가 염색체 안정화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며, 이 스모유전자가 없으면 세포에 염색체 이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 암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큰 실마리를 제공하였음.

- 이번 연구결과는 암의 초기발생 단계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표적을 제공하여, 향후 항암제 개발로 연결된다면 암정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담배가격 인상 9개월이 지나도 흡연율 감소효과는 지속!

- 9월 현재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5%포인트 감소한 50.3%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이후 3개월 단위로 흡연율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9월 현재 성인 남성흡연율이 지난해 57.8%에서 7.5%포인트 감소한 50.3%로 낮아져 담배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특히, 담배가격에 보다 민감한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가 두드러짐.

※ 흡연율 (한국갤럽) : 57.8%('04.9)→53.3%('05.3)→52.3%('05.6)→50.3%('05.9)